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5년 6월 26일(금) 10:00~14:00

장 소 : 섬머셋펠리스 서울(SOMERSET PALACE SEOUL) 미팅룸A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2015년
6월
26일
(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시간	진 행 내 용
10:00~10:30	■ 등록
10:30~10:50	■ 델파이조사 결과 발표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50~12:20	■ 토론 1 : 강성봉(동북아신문 기자)
	■ 토론 2 : 김승역(너머 고려인시민단체)
	■ 토론 3 : 김태기(호남대학교 교수)
	■ 토론 4 : 박옥식(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대표)
	■ 토론 5 : 윤경남(국제교육원 장학사)
	■ 토론 6 : 임영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토론 7 : 채정민(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12:20~12:40	■ 종합토론
12:40~14:00	■ 오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조사개요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과 주요 정책과제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학계, 현장 및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차 조사는 4월 13일에서 4월 17일까지, 그리고 2차 조사는 4월 27일에서 5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연구·문헌의 검색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서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 중에서 전화를 통해서 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지를 보내고 일주일 정도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에서는 30명 중 26명이 응답하였으며, 2차에서는 25명이 응답하였다.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서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기간 이후에 회신하여 조사결과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관련 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1 조사대상자 관련분야 및 참여자수

구분	전문가관련분야	참여 전문가 수
학계전문가	정치외교학, 글로벌 서비스학, 문화콘텐츠학, 이주동포 연구원 등	16명(1,2차 동일)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신문, 지역 한국어 교사 등	7명(1,2차 동일)
정책전문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국제교육원 등	5명(2차 4명)

1차 조사에서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들어보기 위하여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된 지역별 현재 이슈, 지역별 미래 이슈,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제,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동포사회가 제공해야 할 지원 등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동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여 재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동포사회의 현재 및 미래 이슈

(1)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① 미국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미국 동포사회의 역사가 깊어지고 미국사회에서의 동포들의 성공 경험이 축적되어짐에 따라서 거주국에서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한 성장·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동포 사회의 결속 등의 문제가 더욱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미국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주류 사회 진출(4.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사회 결속 및 네트워크 구축(4.4), 이중국적 취득 문제(3.68), 자녀 교육 및 결혼(3.6), 동포 경제 개선 문제(3.5),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3.48), 노후 준비(3.36), 남북통일문제(3.28)와 재외국민선거권(3.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미주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정치적·사회적 역량강화: 주류사회 진출	4.60	0.5	100
동포사회 결속 및 네트워크 구축	4.40	0.64	92
이중국적취득문제	3.68	0.94	64
자녀교육 및 결혼	3.60	0.95	64
동포 경제 개선 문제	3.50	0.97	50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	3.48	1.04	48
노후준비	3.36	1.07	44
남북통일문제	3.28	0.89	44
재외국민선거권	3.28	0.89	4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3번 문항 = 24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중국 동포사회 현재 이슈

중국 동포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동포들의 도시 및 국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조선족 자치구 해체, 조선족학교 폐교, 가족해체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중국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조선족학교 폐교 등으로 인한 민족교육 지원(4.5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 및 국제 이주로 인한 가족 해체(4.21), 조선족 자치주 해체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4.17) 및 한국 내 취업·직업교육 및 비자발급 조건 완화(4.17), 조선족 동포사회와 뉴커머와의 조화(4.00), 경제적 생활 안정(3.89), 재중 동포들의 권익 보호(3.86), 현지 상류사회 진출(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중국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조선족 학교 폐교 등으로 인한 민족교육 지원	4.52	0.66	91.3
도시 및 국제 이주로 인한 가족 해체	4.21	0.99	82.6
조선족 자치주 해체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4.17	0.88	69.5
한국 내 취업·직업 교육 및 비자발급 조건 완화	4.17	0.77	56.5
조선족 동포사회와 뉴커머와의 조화	4.00	0.79	69.5
경제적 생활 안정	3.89	0.81	69.5
재중 동포들의 권익 보호	3.86	0.86	65.2
현지 상류사회 진출	3.52	0.73	47.8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일본 동포사회 현재 이슈

일본 동포사회에서는 민족교육문제, 일본 내에서의 법적 지위 문제 등 그동안 동포사회 안에서 지속되어 온 문제 이외에 최근 한일 간의 정치 상황의 악화가 동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일본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험한 여론 형성으로 인한 불안감(4.3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교육 문제(4.17)와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정치 이슈화(4.17),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와의 통합(4.04), 체류에 관한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3.95),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3.86),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3.82), 모국 자유 왕래 기반 마련(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일본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험한 여론 형성으로 인한 불안감	4.30	0.76	82.6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정치 이슈화	4.17	0.71	82.6
민족교육 문제	4.17	0.86	78.2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의 통합	4.04	0.87	65.2
체류에 관한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	3.95	0.84	65.2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	3.86	1.01	52.1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	3.82	0.77	69.5
모국 자유 왕래 기반 마련	3.52	0.84	47.8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4번 문항 = 22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 현재 이슈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에서는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한 거주국 내외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한민족 정체성 유지의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거주국의 경제침체로 안정적 정착 및 경제적 성공의 어려움(4.39)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어 능력 상실(4.30), 자녀교육문제(4.13), 러시아 이주자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3.95), 한국 내 자유로운 거주와 노동권 등 법률의 제도화 문제(3.91),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3.86), 역사, 문화, 예술활동 지원(3.68), 중앙아시아 국가 언어사용 문제(3.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5

독립국가연합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거주국의 경제침체로 안정적 정착, 경제적 성공의 어려움	4.39	0.58	95.6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어 능력 상실	4.30	0.92	78.2
자녀교육문제	4.13	0.71	81.8
러시아 이주자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3.95	0.63	78.2
한국 내 자유로운 거주와 노동권 등 법률의 제도화 문제	3.91	0.9	65.2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3.86	0.69	69.5
역사, 문화, 예술 활동 지원	3.68	0.83	65.2
중앙아시아 국가 언어 사용 문제	3.47	0.84	52.1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5번, 8번 문항 = 22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⑤ 동포사회 공통 현재 이슈

동포사회에 공통적으로는 거주국에서의 동포사회의 성장·발전과 한민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과 동포들의 주류사회로의 진출, 동포사회의 통합과 한민족 정체성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동포사회 공통의 가장 큰 이슈는 동포사회 권리 신장 및 주류사회 진출(4.4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4.33), 한민족 정체성 강화(4.32),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4.16), 경제적 생활 안정(4.12), 부모와 자녀세대와의 소통 확대(4.00),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의 가교 역할(3.92) 및 민족 교육 지원(3.92), 모국에서의 권리 확대 문제(3.8), 국제 이해 교육 및 외국어 교육(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6

동포사회 공통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동포사회 권리 신장 및 주류사회 진출	4.45	0.65	91.6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4.33	0.76	83.3
한민족 정체성 강화	4.32	0.85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한국유학 및 취업,연수 등의 기회)	4.16	0.62	88
경제적 생활 안정	4.12	0.66	84
부모와 자녀세대와의 소통 확대	4.00	0.76	72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의 가교 역할	3.92	0.99	68
민족 교육 지원	3.92	0.81	72
모국에서의 권리 확대 문제(재외국민선거권, 병역, 이중국적 허용, 거주및노동비자등)	3.80	0.70	64
국제 이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3.48	0.65	5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1번, 2번 문항 = 24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① 미국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미국 동포사회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동포사회의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가 미래에도 여전히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미국 동포사회 미래의 가장 큰 이슈는 현지 주류사회 진출(4.5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사회의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4.40), 교육을 통한 차세대 인재 육성(4.28), 한류 등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가교 역할(4.12), 한인사회의 외연 확대(4.08), 모국과의 네트워크 확대(4.00),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증대(3.92), 경제적 안정 및 노후 준비(3.68), 남북 통일(3.6), 재외국민선거권을 통해 한국 내 정치 참여 확대(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

미주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현지 주류사회 진출	4.56	0.58	96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4.4	0.70	88
교육을 통한 차세대 인재 육성	4.28	0.89	80
한류 등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가교 역할	4.12	0.78	76
한인 사회의 외연 확대(다인종 한국인을 커뮤니티에 포함)	4.08	0.64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확대(문화, 경제, 학술 교류 등)	4.00	0.81	68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증대	3.92	0.86	68
경제적 안정 및 노후 준비	3.68	0.69	64
남북 통일	3.60	0.91	48
재외국민선거권을 통해 한국 내 정치 참여 확대	3.20	0.91	3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중국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중국 동포사회에서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연변 자치구의 존립의 문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민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동포사회의 역량 강화가 미래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포들의 문제에 대한 대응 등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조사 결과, 중국 동포사회 미래의 가장 큰 이슈는 연변 자치구 유지 문제(4.2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통일된 한국에 기여하는 동포사회 역량 발전(4.17), 국내의 반사회적 문제에 따른 대응(4.04), 한국 취업 및 비자 발급(3.95), 경제적 생활 안정(3.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8

중국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연변 자치구 유지 문제	4.21	0.73	82.6
통일된 한국에 기여하는 동포 사회 역량 발전	4.17	0.71	82.6
국내의 반사회적 문제에 따른 대응	4.04	0.82	78.2
한국 취업 및 비자 발급	3.95	0.76	69.5
국내권익신장	3.91	0.79	65.2
민족 문화 및 언어 교육	3.91	0.79	65.2
경제적 생활 안정	3.86	0.62	73.9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일본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일본에서는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른 한국인 배척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되고, 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 재일동포 간의 통합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일본 동포사회 미래의 가장 큰 이슈는 혐한류 및 재일외국인 배외주의(4.3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교육 및 정체성(4.30), 한일 및 북일 관계의 정치 이슈화(4.08),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의 통합(4.04),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 극복 문제(3.82),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3.77), 모국 자유 왕래 기반 구축(3.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9

일본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
혐한류 및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4.34	0.77	82.6
민족교육 및 정체성	4.30	0.76	82.6
한일 및 북일 관계의 정치적 이슈화	4.08	0.79	82.6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의 통합	4.04	0.76	73.9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 극복 문제	3.82	0.77	60.8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	3.77	0.68	65.2
모국 자유 왕래 기반(법적체류문제)	3.69	0.70	56.5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5번 문항 = 22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에서는 현재와 같이 미래에도 동포들의 경제적 안정과 재정착 문제 등이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조사결과,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 미래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적 안정(4.2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들의 재정착 문제(4.17), 현지 정치참여 및 주류 사회 진출(4.00), 한민족 정체성 유지(3.95)와 동포사회 지역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3.95), 한국사회와의 네트워킹(3.91)과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구제 문제(3.91),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3.82), 지역 내 종교적 갈등 문제(3.45), 한인 이중국적 문제(3.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독립국가연합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경제적 안정	4.21	0.67	86.9
동포들의 재정착 문제(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권을 떠도는 동포들의 정착 문제)	4.17	0.77	78.2
현지 정치참여 및 주류사회 진출	4.00	0.73	73.9
한민족 정체성 유지	3.95	0.82	73.9
동포사회 지역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3.95	0.56	82.6
한국사회와의 네트워킹	3.91	0.51	82.6
사할린 강제 동원 피해 구제 문제	3.91	0.66	73.9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	3.82	0.86	60.8
지역 내 종교적 갈등 문제(한국 선교단체와 아랍권 국가, 러시아 정교 등)	3.45	0.73	52.1
한인 이중 국적 문제	3.30	0.92	43.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1번 문항 = 22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⑤ 동포사회 공통의 미래 이슈

재외동포사회에 공통적인 미래의 주요 이슈는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주류사회 진출, 한민족 정체성 강화,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미래 동포사회 공통의 가장 큰 이슈는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4.5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권리 신장과 정치 참여를 통한 주류사회 진출(4.44), 한민족 정체성 강화(4.28),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4.24),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및 모국에의 기여(4.08), 세대간 의사소통 및 단절문제(3.96), 한국 유학 및 취업, 연수 등의 기회 제공(3.92), 경제적 생활 안정(3.88), 모국에서의 동포 권리 문제(3.80), 해외대학 등에 한국학 또는 교양과목에 대한 지

원(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동포사회 공통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4.56	0.65	92
권리 신장과 정치 참여를 통한 주류사회 진출	4.44	0.65	92
한민족 정체성 강화	4.28	0.67	88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4.24	0.72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및 모국에의 기여	4.08	0.64	84
세대 간 의사소통 및 단절 문제	3.96	0.67	76
한국 유학 및 취업, 연수 등의 기회 제공	3.92	0.70	80
경제적 생활 안정	3.88	0.66	80
모국에서의 동포 권리 문제 (재외국민선거권, 병역, 이중국적 허용, 거주, 노동 비자 등)	3.80	0.57	72
해외대학 등에 한국학 또는 교양과목에 대한 지원	3.64	0.81	6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 이슈

(1)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①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현재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가장 큰 이슈는 동포사회의 이슈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들의 주류사회로의 진출이었으나, 이와 함께 한민족 정체성의 혼란과 민족교육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다. 또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도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재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주류사회 진출(4.4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체성 혼란(4.24), 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4.16),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문제(4.12), 사각지대의 청소년 지원 문제(3.96), 소수민족이 받는 차별 대우(3.64), 고등교육기관 입학 문제(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2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주류사회 진출	4.40	0.64	92
정체성 혼란	4.24	0.66	88
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	4.16	0.74	80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문제	4.12	0.72	80
사각 지대의 청소년 지원 문제	3.96	0.78	76
소수민족이 받는 차별 대우	3.64	0.63	56
고등교육기관 입학 문제	3.48	0.58	4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중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중국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조선족 자치구 해체에 따른 민족정체성 유지와 청소년의 지원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었다. 조사결과, 현재 중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민족정체성 유지 문제(4.42)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와 분리된 청소년 지원 문제(4.17), 주류사회 적응 및 진출(4.13), 현지 한국학교의 지원(3.86),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3.86), 한중 FTA에 대비한 인적자원 육성(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3

중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민족정체성 유지 문제	4.43	0.66	82.6
부모와 분리된 청소년 지원 문제 (부모의 도시 혹은 한국의 취업으로 가족 분리 혹은 해체)	4.17	0.77	78.2
주류사회 적응 및 진출	4.13	0.75	78.2
현지 한국학교의 지원	3.86	0.69	69.5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3.86	0.75	73.9
한중 FTA에 대비한 인적자원 육성	3.82	0.71	65.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근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른 반한 감정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유지, 조선학교 차별 등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조사결과, 현재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험한류 등 재일외국인 배외주의(4.34)였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정체성 함양(4.21)과 민족교육의 위축(4.21),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4.13),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3.95)과 한국과의 교류(3.95), 부모세대와의 소통(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4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혐한류 등 재일 외국인 배외주의	4.34	0.64	91.3
민족정체성 함양	4.21	0.79	91.3
민족교육의 위축	4.21	0.73	91.3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4.13	0.54	91.3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3.95	0.63	78.2
한국과의 교류	3.95	0.76	69.5
부모세대와의 소통	3.82	0.65	69.5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재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4.34)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려인 정체성 유지(4.30)와 고등교육 기회와 취업(4.30), 부모세대와의 언어·문화 단절(4.13), 국내 체류 청소년의 교육문제(3.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5

독립국가연합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	4.34	0.57	95.6
고려인 정체성 유지	4.30	0.7	86.9
고등교육 기회와 취업	4.30	0.82	86.9
부모세대와의 언어·문화 단절	4.13	0.62	86.9
국내 체류 청소년 교육 문제	3.95	0.63	78.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⑤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현재 이슈

국가별로 우선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재외동포 청소년의 민족교육과 주류사회 진출의 문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조사결과, 현재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가장 큰 이슈는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4.6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4.24), 재외동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20), 민족교육 지원(4.16)와 한민족 정체성 유지(4.16) 및 차세대 단체 육성(4.16), 한국 청소년과의 네트워킹(4.12), 부모세대와의 소통기반 구축(3.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6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4.60	0.57	96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24	0.72	84
재외동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20	0.57	92
민족교육 지원	4.16	0.68	84
한민족 정체성 유지	4.16	0.74	80
차세대 단체의 육성	4.16	0.8	76
한국 청소년과의 네트워킹	4.12	0.83	80
부모세대와의 소통 기반 구축	3.96	0.73	7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①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미래에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들 사이에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류사회 진출의 문제도 여전히 주요 이슈가 될 것이지만, 이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역할과 가치관의 정립, 민족정체성의 유지 등의 문제가 보다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사결과, 미래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4.4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정체성 유지 및 함양(4.24), 모국과의 교류 및 유대강화(4.16),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4.12), 한국 학

생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3.80), 거주국 지역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구축(3.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7 **미주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모국과 거주국에서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	4.44	0.5	100
민족정체성 유지 및 함양	4.24	0.66	88
모국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	4.16	0.74	80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12	0.72	80
한국 학생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3.80	0.7	64
거주국 지역의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3.79	0.65	66.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중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중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에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한국과의 협력 등이 미래 중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사결과, 미래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민족 정체성의 유지(4.39)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선족 교육을 위한 모국과의 협력(4.26),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4.21)과 주류사회 진출(4.21), 연변자치구 유지(4.17), 가족 해체로 인한 문제(4.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민족 정체성 유지	4.39	0.72	86.9
조선족 교육을 위한 모국과의 협력	4.26	0.54	95.6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	4.21	0.67	86.9
주류사회의 진출	4.21	0.73	82.6
연변자치구 유지	4.17	0.65	86.9
가족 해체로 인한 문제	4.00	0.79	69.5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반한 감정에 대한 대처, 민족 차별 문제 등 현재의 이슈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미래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4.26)과 반한감정에 대한 대처(4.2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학교 차별 문제(4.21), 모국 연수, 교육, 유학 등의 기회 확대(4.13), 주류사회 진출 및 상급학교 진학(4.08), 일본 내 청소년 조직기반 구축(3.73), 남북한 통일 문제(3.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	4.26	0.61	91.3
반한감정에 대한 대처	4.26	0.75	82.6
민족학교 차별 문제	4.21	0.51	91.3
모국 연수, 교육, 유학 등의 기회 확대	4.13	0.75	86.9
주류사회의 진출 및 상급학교 진학	4.08	0.73	78.2
일본 내 청소년 조직기반 구축	3.73	0.68	60.8
남북한 통일 문제	3.69	0.7	56.5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교류기회의 확대, 한민족 정체성 유지,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등 현재의 이슈가 대부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미래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과의 교류기회의 확대(4.52)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4.21),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4.17),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및 세대 갈등(4.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국과의 교류기회 확대	4.52	0.51	100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	4.21	0.73	82.6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17	0.71	82.6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및 세대 갈등	4.13	0.62	82.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⑤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미래 이슈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적으로는 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이해를 위한 교육과 주류사회 진출, 한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미래의 주요한 이슈로 예측되었다. 조사결과, 미래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어·문화·역사 교육의 확대(4.48)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4.24)과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4.28), 한민족 정체성 강화(4.24),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4.20),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증진(4.16), 민족교육기관 지원(4.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1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국어문화·역사 교육의 확대	4.48	0.65	92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28	0.73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4.28	0.54	96
한민족 정체성 강화	4.24	0.66	88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	4.20	0.70	84
부모 세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4.16	0.68	84
민족교육기관 지원	4.04	0.61	8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3)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과 필요 능력

(1)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경쟁력, 한민족 정체성,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융합적 지식 생산 능력, 창의성, 국제간 및 남북간 통합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상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시민인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해 나가는 능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인재에 대한 동의 정도(4.48)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재(4.44),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인재(4.40)와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인재(4.40),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인재(4.29), 융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4.24)와 창의성을 갖춘 인재(4.24), 국제간, 남북간 통합능력이 있는 인재(4.04), 네트워크 구축능력이 있는 인재(3.62), 정치 참여 수용성이 높은 인재(3.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2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인재	4.48	0.65	92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재	4.44	0.65	92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인재	4.40	0.64	92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인재	4.40	0.64	92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인재	4.29	0.62	91.6
융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	4.24	0.72	84
창의성을 갖춘 인재	4.24	0.72	84
국제 간 및 남북 간 통합능력이 있는 인재	4.04	0.67	80
네트워크 구축능력이 있는 인재	3.62	0.57	80
정치 참여 수용성이 높은 인재**	3.60	0.70	48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24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미래인재로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능력

미래 인재로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는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창의적인 능력, 타인 존중 및 배려, 인생·진로 개척 능력, 협동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와 지식의 통합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와 지식의 통합 능력, 정보/ICT활용능력 등의 기술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는 의사소통, 세계시민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등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의식이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동의 정도(4.4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시민의식(4.40),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4.32), 창의적인 능력(4.20)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4.20), 인생·진로 개척 능력(4.12)와 협동 능력(4.12), 문제해결능력(4.04)와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4.04), 비판적 사고력(3.88)과 정보/ICT 활용능력(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3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의사소통능력	4.44	0.65	92
세계시민의식	4.40	0.64	92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의식	4.32	0.62	92
창의적인 능력	4.20	0.57	92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	4.20	0.7	84
인생·진로 개척 능력	4.12	0.52	92
협동 능력	4.12	0.6	88
문제해결능력	4.04	0.53	88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	4.04	0.73	76
비판적 사고력	3.88	0.52	80
정보/ICT 활용 능력	3.88	0.43	8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4)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소외와 정체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 정체성 형성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국에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의 문제(4.60)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민족 문화, 한국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인프라 부족(4.28),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4.20), 재외동포로 성장하기 위한 롤모델 등 정보 부족(4.08),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단절(4.00),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생활 및 교육기회의 제한(3.92), 거주국에서 겪는 차별문제(3.76), 거주국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4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거주국에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의 문제	4.60	0.50	100
한민족 문화, 한국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인프라 부족	4.28	0.79	80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 (장학금, 프로그램 확보 등)	4.20	0.76	80
재외동포로서 성장하기 위한 롤 모델 등 정보 부족	4.08	0.81	72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단절	4.00	0.76	72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 및 교육기회의 제한	3.92	0.64	76
거주국에서 겪는 차별문제	3.76	0.52	72
거주국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러시아, 중국 등)	3.64	0.81	6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5)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및 이유

(1)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이밖에 미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동의 정도(4.6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4.44), 일본(4.33), 독립국가연합(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으로는 남미, 동남아, 유럽 등의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로 제시되었다.

표-25 **인재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국**	4.66	0.48	100
미국***	4.44	0.71	88
일본 ****	4.33	0.70	87.5
독립국가연합(CIS)*****	4.25	0.67	87.5
기타지역 { 응답: 유럽 (1명), 남미(4명), 동남아(2명) }*****	4.25	0.46	100

* 총 사례수 = 25명/유효 사례수 **=25명, ***, ****, ***** = 24명, ***** = 8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미래 인재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를 선정한 이유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선정에는 인재개발 효과와 파급효과, 정치·경제적 비중, 정치·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의 교류, 민족교육의 실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의 선정에는 인재개발 효과와 파급효과(4.44)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

음으로 관심국의 정치·경제적 비중과 중요성(4.36), 관심국과 정치·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의 빈번한 교류(4.08), 관심국의 민족교육의 어려움(4.00), 전 세계의 축소판(3.84), 관심국의 재외동포 및 한국유학생 수(3.60), 관심국의 경제적 어려움(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6 관심 국가의 선정 이유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관심국의 인재개발 효과와 파급효과	4.44	0.71	88
관심국의 정치·경제적 비중과 중요성	4.36	0.70	88
관심국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측면에서의 빈번한 교류	4.08	1.03	72
관심국의 민족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4.00	0.78	80
관심국이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살고 있어 전 세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3.84	0.85	64
관심국의 재외동포 및 한국유학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	3.60	0.95	52
관심국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 한국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서	3.24	1.01	3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6)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안

(1)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정책 수행의 컨트롤타워의 부재, 지원 방안의 부재, 예산과 인력의 부족, 국가별 차별적인 정책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전 및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에 대한 동의 정도(4.7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권

트롤타워의 부재(4.40)와 외국적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원방안 부재(4.40), 예산 및 인력 부족(4.28), 국가 간 차별적인 정책의 부재(4.24), 병역, 이중국적, 노동과 거주 의 비자문제 등 법적 문제 해결(3.92), 재외동포 청소년을 격려하는 정책 부재(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7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4.72	0.54	96
컨트롤타워의 부재	4.40	0.70	88
외국적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원 방안 부재	4.40	0.64	92
예산 및 인력 부족	4.28	0.84	76
국가 간 차별적 정책 부재	4.24	0.77	80
병역, 이중 국적, 노동과 거주 의 비자문제 등 법적 문제 해결	3.92	0.75	76
재외동포 청소년을 격려하는 정책 부재	3.84	0.85	6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향후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안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또는 지역별로 재외동포 청소년에 관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법 및 정부조직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연수·교육 및 민족 교육 지원, 한국청소년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향 설

정에 대한 동의 정도(4.5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체계적인 정책 방향 및 지원 목표 설정(4.48), 모국연수, 교환학생, 유학, 취직 등의 지원 확대(4.44), 재외동포 청소년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4.40), 재외동포 관련 통일적인 정부조직 정비(4.32), 재외동포 관련 법 제정(4.12), 거주국의 민족교육 지원 확대(4.08), 거주국 단체 및 한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4.04), 현지 NGO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4.00), 통일시대 국제적 감각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8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향 설정	4.56	0.50	100
체계적인 정책 방향 및 지원 목표 설정	4.48	0.71	88
모국연수, 교환학생, 유학, 취직 등의 지원 확대	4.44	0.57	96
재외동포 청소년 기초 통계 수집 및 분석(체계적인 조사 연구)	4.40	0.70	88
재외동포 관련 통일적인 정부조직 정비	4.32	0.80	80
재외동포 관련 법 제정**	4.12	0.72	80
거주국의 민족교육 지원 확대	4.08	0.64	84
거주국 단체 및 한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4.04	0.69	79.1
현지 NGO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	4.00	0.81	88
통일시대 국제적 감각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	3.88	0.83	7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24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3)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는 법·제도적 측면, 시설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과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미래 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국내 기술 교육 및 취업제도 확대, 거주국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재외동포처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과제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동의 정도(4.4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4.36), 국내 기술 교육 및 취업제도 확대(4.12)와 거주국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12), 재외동포처 신설(3.96), 재외동포 인구 비례로 예산 지원 규모 현실화(3.88), 단기 대체 복무 등 병역문제 개선(3.80)와 거주 및 노동비자 확대 (3.80), 국회상임위 재외동포위원회 설치(3.76)와 이중국적 허용(3.76), 재외 한국학교 외국인 입학 허용(3.68), 국내체류 동포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개선(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9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 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4.44	0.71	88
재외동포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4.36	0.63	52
국내 기술 교육 및 취업 제도 확대	4.12	0.66	84
거주국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모국방문, 장학금 지급 등)	4.12	0.83	72
외교부에서 분리하여 재외동포처 신설	3.96	1.13	64
재외동포 인구 비례로 예산 지원 규모 현실화	3.88	0.72	76
단기 대체 복무 등 병역문제 개선	3.80	0.57	72
거주 및 노동비자 확대	3.80	0.64	68
국회상임위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3.76	1.05	60
이중국적 허용	3.76	0.72	68
재외한국학교 외국인 입학 허용	3.68	0.69	64
국내체류 동포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개선	3.52	0.58	48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는 국내·외 재외동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외동포 민족학교 지원, 교육·숙박시설의 확충 및 개선,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세미나 및 국제회의 시설 설치, 지역별 재외동포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이 주요과제로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정부의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로 국내·외 재외동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동의 정도(4.4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민족학교(유치원, 초·중·고) 지원(4.29),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숙박시설 확충 및 개선(4.16),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강연,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지원(4.12), 지역별 재외동포청소년지원센터 설치(3.88),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통합 운영(3.76), 거주국 연수센터 설치(3.72), 거주국에서의 청소년교육을 위한 박물관·도서관 건립(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0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 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국내·외 재외동포 통합지원센터 설치	4.44	0.65	88
재외동포 민족학교(유치원, 초·중·고) 지원	4.29	0.62	92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숙박 시설 확충 및 개선	4.16	0.74	80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강연,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지원	4.12	0.78	84
지역별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3.88	0.72	68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통합 운영	3.76	0.77	64
거주국 연수센터 설치	3.72	0.73	56
거주국에서의 청소년교육을 위한 박물관·도서관 건립	3.64	0.9	5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로는 현지 교사의 확보와 지원, 국내·외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 교사 파견 확대 등 기존 전문가 인력에 대한 확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지 교사의 확보와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4.3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국내와 현지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4.25), 동포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인력의 양성(4.24), 재외동포교육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4.16), 미래 인재로서 한인 유학생 관리(4.04), 현지 대학의 한국(어) 관련학과 학생 지원(4.00), 한국에서 교사 파견 확대(3.80), 재외동포 청소년 교사뱅크 구축(3.79), 교육부 산하 재외동포 청소년국 설치 및 담당관 배치(3.60), 재외동포 전문가 자격증 신설(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 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현지 교사의 확보와 지원 확대	4.32	0.62	92
국내와 현지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4.25	0.60	92
동포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인력 양성	4.24	0.72	84
재외동포교육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거주지 교육, 국내 초청 연수 등)	4.16	0.74	88
미래 인재로서 한인 유학생 관리	4.04	0.67	80
현지 대학의 한국(어) 관련학과 학생 지원	4.00	0.57	84
한국에서 교사 파견 확대	3.80	0.57	72
재외동포 청소년 교사 뱅크 구축	3.79	0.72	72
교육부 산하 재외동포 청소년국 설치 및 담당관 배치	3.60	1.19	60
재외동포 전문가 자격증 신설	3.48	0.82	4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프로그램 측면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로는 재외동포 우수인재 발굴 프로그램, 모국 연수·교육·체험 프로그램,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기업 연계 프로그램, 재외동포용 콘텐츠, 거주국 청소년 활동지원과 활동대회 개최, 거주국 내 지역별, 연령별 프로그램, 차세대 리더들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표-32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측면의 정책 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48	0.65	92
모국 연수·교육·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4.48	0.82	88
모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4.44	0.71	88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4.32	0.47	100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 등 콘텐츠 개발	4.2	0.70	84
거주국 청소년 활동지원과 활동대회 개최	4.16	0.88	88
거주국 내 지역별,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4.16	0.68	84
차세대 리더들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4.12	0.70	88
지자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4.12	0.78	76
재외동포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 확대	4.12	0.78	76
인터넷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	4.04	0.67	80
모국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4.00	0.64	80
군대 체험·국토대장정·문화답사 프로그램 등	3.96	0.78	76
거주 국가별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 비교 연구	3.96	0.67	7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조사결과,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로 재외동포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48)과 모국 연수·교육·체험 프로그램 활성화(4.48)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모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4.44),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인턴십 등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4.32),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 등 콘텐츠 개발(4.20), 거주국 청소년 활동지원과 활동대회 개최(4.16)와 거주국 내 지역별,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4.16), 차세대 리더들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4.12)과 지자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4.12) 및 재외동포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 확대(4.12), 인터넷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4.04), 모국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4.00), 군대 체험·국토대장정·문화답사 프로그램 등 개발(3.96)과 거주 국가별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 비교 연구(3.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동포사회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지원과제를 법·제도적 측면, 시설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민간교육기금의 설립, 현지정착과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동포사회의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로 민간교육기금의 설립(4.28)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지정착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4.16), 한국학교 졸업생들에게 거주국 학교의 제 2외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 요구(4.00),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3.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3

동포사회의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민간 교육기금의 설립	4.28	0.79	88
현지정착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	4.16	0.62	88
한국학교 졸업생들에게 거주국 학교의 제2외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 요구	4.00	0.81	68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3.96	1.05	7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로는 재외동포청소년센터의 확충, 민족 교육시설의 확충, 기숙시설의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로 재외동포청소년센터의 확충(4.33)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민족 교육시설의 확충(4.29), 미래인재 개발 차원의 기숙 시설 운영(4.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4

동포사회의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청소년센터 확충	4.33	0.7	88
민족 교육시설 확충	4.29	0.69	88
미래인재 개발 차원의 기숙시설 운영(타국 간 유학동포청소년 활용시설)	4.12	0.74	8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로는 교육 및 정보 담당 전문가 양성, 교사뱅크 구축, 전문가의 파견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동포사회의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로 교육 담당 전문가의 양성(4.28)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거주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정보담당 전문가 양성(4.16), 거주국 교사뱅크 구축 및 운영(4.12), 선진지역 동포사회 전문가의 후진지역 동포사회 파견(3.92), 청소년문화대학 설립(3.68), 현지인 시니어 및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인력풀 확보(3.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5 동포사회의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	4.28	0.73	84
거주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정보담당 전문가 양성	4.16	0.62	88
거주국 교사뱅크 구축 및 운영	4.12	0.60	88
선진 지역 동포사회 전문가의 후진지역 동포사회 파견	3.92	0.81	64
청소년문화대학 설립	3.68	0.74	52
현지인 시니어 및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인력풀 확보	3.60	0.64	6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지원과제로는 동포 기금 및 장학사업 프로그램, 창의성 및 자기주도성 함양 프로그램, 멘토·멘티 프로그램, 민족교육 프로그램, 민족학교 연합 축제 및 캠프 개최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동포사회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지원과제로 동포 기금 및 장학사업 프로그램 운영(4.60)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28),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4.24), 민족교육 프로그램 개발(4.08)과 민족학교 연합 축제 및 캠프 개최(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6 동포사회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의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동포 기금 및 장학 사업 프로그램 운영	4.60	0.5	100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28	0.54	96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4.24	0.59	92
민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4.08	0.75	80
민족학교 연합 축제 및 캠프 개최	4.08	0.7	8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기타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기타 지원과제로는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수요 파악,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포지역의 지원, 동포청소년 관련 정보 DB화 지원,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거주국 지역별 동기 부여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동포사회의 기타 지원과제로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파악에 대한 동의 정도(4.3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포지역 지원(4.28), 동포청소년 관련 정보 DB화 지원(4.24),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방안 마련(4.20), 거주국 지역별로 동기 부여 방안 개발(4.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7

동포사회의 기타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파악	4.36	0.56	96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포 지역 지원(CIS 지역 등)	4.28	0.67	88
동포청소년 관련 정보 DB화 지원	4.24	0.66	68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방안 마련	4.20	0.64	88
거주국 지역별로 동기 부여 방안 개발	4.12	0.72	8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토론문 1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중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강성봉 (동북아신문 편집인)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재중동포라고 할 때 이 안에는 크게 세 부류의 집단이 있다. 첫째, 한국 국적자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재중한인. 둘째, 중국 국적보유자이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동포. 셋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좀 더 세분화하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동포의 경우도 동북3성에 거주하는가 연해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중국의 호구정책으로 인해 존재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거주 중국동포의 경우도 국적이 중국 국적이냐 한국국적이냐에 따라 정책의 접근방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미세한 차이까지 고려하기는 어렵고 세 부류의 재중동포에 대한 정책의 접근 방식이 각각 달라야 한다는 점과 집단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세 집단 전체를 포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중동포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재중한인, 조선족 동포, 중국동포라고 칭하고자 한다.

재중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정책대상이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역시 체류문제, 노동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에서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정책대상이 된다. 조선족동포는 한국정부의 포괄적 정책대상은 아니나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해외거주 외국국적 동포로서 동포정책의 대상이 된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로서 재중동포 청소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중한인 청소년, 조선족동포 청소년, 중국동포 청소년으로 칭하고 그 특성별로 정책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

미래인재 개발전략으로서의 재중동포 청소년 지원정책의 핵심은 교육이다. 재중동포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때 대한민국 나아가서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민자로서 어느 국가에 거주하든지 모든 재외동포교육의 핵심과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현지 주류사회진출을 가능케 하는 현지적응교육과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민족정체성 교육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과제는 상호 배타적이다. 현지적응이 잘되면 잘 될수록 민족정체성은 상실할 가능성이 크며, 민족정체성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현지 주류사회 진출은 물론 현지적응이 잘 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계화의 진척과 한류의 확산 등 한국이 여러 면에서 전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면 될수록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미래인재로서 재중동포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 재중동포 청소년 교육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를 현지적응교육과 민족정체성교육이라는 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정책 과제의 현재 추진상황

1) 재중한인청소년 교육

재중한인 청소년교육은 12개의 한국학교와 20여개의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재중한인청소년에게 정체성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 이주의 역사가 길지 않고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 조기유학생의 현지적응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유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숫자는 중국 교육부 통계를 통해 2012년 말 기준 6만4,488명이란 수치를 확보하고 있지만 초중고 유학생은 아예 관리 대상도 아니다.

중국 내 외국 유학생 가운데 3분의1이 한국유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내 한국유학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에서 밝혔듯 인문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유학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양적인 팽창만큼 질적인 발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미래 한중 관계에서 주춧돌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조선족동포청소년 교육

중국의 공민으로서 중국에서 나고 자란 조선족동포청소년에게 현지적응교육은 큰 문제가 없음이 자명하다. 조선족동포청소년 민족정체성교육의 핵심인 ‘조선어교육’은 동북3성의 경우 중국의 정규학교인 조선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개혁개방 이전 조선족 밀집 거주지역인 동북3성에서는 약 1,200개의 조선족학교가 있어 원하기만 하면 조선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의 한국, 중국의 연해지역으로의 진출 결과 동북3성 조선족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많은 조선족 학교가 문을 닫아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현재는 300개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연해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조선족학교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즉 연해지역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민족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연해지역 조선족 집거지에 조선족학교를 설립한다 해도 중국의 호구제도로 인해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위한 한글학교가 설립되기도 했지만 그 수도 많지 않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호구는 일반적으로 호구라고 불리는데, 이 호구에는 도시호구와 농촌호구가 있다. 도시호구와 농촌호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과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가서 임의로 살 수는 있어도 취업이나 아이들의 입학, 그 도시의 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연가의 교육비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 조선족동포 대부분은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해지역 조선족동포들은 조선족학교를 설립한다 해도 국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해야 한다. 올 들어 중국 상해에서 처음으로 조선족 정규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3) 중국동포청소년 교육

중국동포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교육에서 문제는 왕따, 차별 등이다. 그래서 많은 중국동포청소년들이 아직도 학교에서 자신이 중국동포임을 숨기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민족 정체성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대상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은 중도입국 중국동포청소년 교육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이란 부모가 한국에 진출할 때 어떠한 이유로든 모국에 남겨져 일정 정도 성장한 이후 부모와 합류하게 된 청소년을 말한다. 국내에 있는 중도입국 중국동포자녀가 2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의 통계분석으로는 5,000여명 정도가 학교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는 학교밖에 있는 상태로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 없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아예 처음부터 한국의 학교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현 정책과제 추진의 문제점

1) 실태파악의 부재

재중동포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족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북3성의 조선족학교가 몇 개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선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도입국 중국동포 청소년이 정확히 몇 명인지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재중한인청소년의 경우도 중국의 초중고에 유학하고 있는 조기유학생이 얼마인지 알아야 무슨 대책을 세워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2) 예산의 부족 또는 부재

올 들어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서 조선족동포 특별지원금으로 20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대부분 조선족청소년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으나 제대로 된 조선족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연해지역 조선족 정규학교 설립을 지원하거나 동북3성의 무너져 가는 조선족학교 유지보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반면에 재중동포청소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중도입국 중국동포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다. 중도입국 중국동포청소년을 방치할 경우 미래를 위한 인재로의 양성은 둘째 치고, 불법에 쉽게 노출이 되는 등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실천방안

1)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원

재중한인청소년 관련 조기유학생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유학생 현지적응교육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마찬가지로 동북3성의 조선족학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해지역 조선족청소년 교육과 관련 정확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한글학교 또는 조선족정규학교가 필요하면 몇 개 정도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도입국 중국동포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와 수요를 파악한 연후에야 그에 근거해 지원정책을 적절히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2) 기존시설 설비의 활용

중국에는 이미 한국정부가 설립한 12개의 한국학교가 있다. 12개의 한국학교를 조선

족청소년에게 활짝 개방해야 한다. 조선족동포들이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 적극 보완해서 언제든지 조선족청소년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학교들을 중도입국 중국동포청소년들의 적응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또는 주말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해야 한다. 예산의 증액 없이 발상만 조금 바뀌도 가능한 이러한 정책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

3) 예산의 확충

재중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한중 FTA 등으로 한중경제협력을 위한 인재의 양성이 시급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중동포청소년들은 조만간 닥쳐올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집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통일과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재중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2

(고려인 동포 청소년 교육 및 보육 문제 - 국내체류 고려인을 중심으로)

김승력(고려인 지원센터 대표)

1.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체류 정책과 문제점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청소년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체류비자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먼저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체류 정책과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2003년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는 외국인고용허제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한다. 위원회 결정에 의해 H2 체류자격자는 조선족 동포를 포함해 30만 3천명을 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졌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H2비자는 3년까지 체류 후 출국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시 들어와 1년 10개월을 연장해 체류할 수 있다. 만료 시에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본국에 돌아가 다시 추첨을 기다려야 하고 55세가 넘은 동포에게는 아예 H2비자를 주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었다. 중앙아시아의 경제난으로 일도 찾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가지고 1년 이상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소비하고 다시 빈손으로 모국을 찾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일이 고려인 동포사회에 반복되고 있다.

2012년 4월경부터 법무부는 출국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원하는 동포들을 위해 산하 기관인 동포교육지원단의 관리 하에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을 취득 H2 비자를 계속 거주가 가능한 F4비자로 바꾸어 주는 구제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비자취득용 기술학원이 난립하기도 하고 커미션이 오가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뒤따랐다. 그나마도 한국말이 가능한 중국동포에게나 해당되는 정책으로 한국어를 모르는 고려인들은 시험조차 볼 수 없어 이마저도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유일하게 창틀을 만드는 자격증이 필기 없이 실기만 볼 수 있어 고려인들이 대거 창틀 전문가가 되겠다. 등록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마저도 1년 실시 후 폐지되었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들이 2년 사이에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으면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지침으로 인해, H2 비자 만료일을 앞두고 10회 이상을 출입국

하려는 현상도 동포사회에 일어나지만 본국과 거리가 멀어 항공료가 비싼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들에겐 별 의미 없는 지침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4월 1일부로 법무부는 만 60세 미만까지 결격사유가 없는 H2비자 만기출국자들에 한해 6개월이 후 H2비자를 재발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8, 90일 체류)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개선책을 발표했고 이어 올해에는 '150327 -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를 통해 4월부터 고려인동포에 대해서는 만기 출국 후 즉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계속거주를 못하고 들락날락 거려야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재외동포 비자라 불리는 F4 비자는 출국하지 않고 연단위로 연장하며 계속체류가 가능한 비자이다. 2009년 12월부터 정부의 F4비자 자격부여 대상 확대 조치로 F4비자 체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조건은 '4년제 대학 졸업자, 기업체 관리직원, 정부공인 동포단체 소속자' 등이었다.

2010년 4월부터는 국내 노동인력이 부족한 특정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정식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H2 취득 자중 2년간 200일 이상 해외 거주자, 만63세 이상자로 더 확대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2011년부터 러시아 지역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러시아가 국민소득 10000불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H2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무조건 F4비자만 발급하고 있다. F4비자는 재외동포들이 출국하지 않고 모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뒤엎는 독소 조항도 있다. 단순노무를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재2010년 4월부터 F4 체류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는 업종을 고시하고, 제한 업종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약 150만원 벌금, 2차 적발 시 체류자격 박탈 조치를 취했었다. 다행히 올 2월 (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를 통해 서비스업을 제외한 단순노무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고려인 제도발전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해 고려인 동포들의 노동권(f4)과 거주권 침해 문제(h2)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 지침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은 국내 상황에 따라 바뀌는 법무부 지침이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인 동포들의 모국내 자유로운 거주와 노동권 보장을 법률로 제도화할 필요 있다.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고려인 특별법'이라는 법률적 기반이 있고 이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2. 고려인 동포 청소년의 교육과 보육 문제

고려인 동포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문제,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정책에 대한 국내 정책 사례 찾기가 어렵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자녀의 출생과 보육, 교육 생애 주기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인 부모를 따라 중도 입국한 자녀들로 언어,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내국인 자녀들과 차별을 받고 있다. 중도 입국한 고려인 동포 자녀들의 경우 타 이주 노동자 자녀들과 달리 국적 국에서는 저 학령기에 외모 차이로 인한 따돌림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가족과 작게는 2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별거와 이산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상처도 가지고 있었다. 국내 학교생활에서는 이주 아동들의 겪는 언어 소통문제로 인한 동급생과의 소외 문제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고려인 동포 자녀의 대부분은 국적 국에서 이주 노동자화 된 부모 대신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제3자에 의해 양육됨에 따라 성장기와 학령기에 정상적 학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도 입국 후 언어 소통 불능으로 인해 학습지체 현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초중등 학교 공교육 과정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학교에서 입학할 수 없으며,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 특수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취학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 활동비 외 급식비 등 각종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대상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과 지역 아동 센터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등생의 돌봄 또한 부모스스로 진학과 진로의 1차 상담과 조력을 할 수 없다. 고교 진학을 위한 중등학교 진학 코디네이터 절실하고 특성화고교 진학 진로 지도 및 학습조력자 역할과 진로지도가 어려운 부모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 고려인 동포 자녀를 위한 진학, 진로 외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구축 시급(정책적 문제)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 입국 청소년의 대부분은 비취학 상태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어 취학률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언어 문제로 인한 국내 고교에서 학습 어려움, 국적 국에서 서류 미비, 비싼 보육료와 보육 시설 미비로 동생 돌봄 역할 대신하거나, 취업 아르바이트 등이 취학률을 낮추고 있다. 형편상 고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 직업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필요가 있었다. 현행 대부분 직업 전문학교는 노동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외국 국적은 노동부 지원이 불가하여 전문기술 인력으로 고려인 동포 아이들의 진출이 막혀 있다.

고교이후 과정은 19세 25세 미만 자녀(중앙아시아)의 경우 유학 비자를 제외한 체류권 제한으로 단기체류만 허가하고 있어 국내 장기체류 자체가 막혀있다. 단기 체류기

간동안 국내 기술자격증을 취득해 F4 체류 자격으로 변경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언어문제로 힘들고 자격증을 땀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를 할 수 없어 젊은이들은 불법 노동자로 내몰게 된다. 고려인 동포 자녀 대부분 일반계 고교 졸업 후 진로와 체류신분이 불투명해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동포 자녀의 안정적 체류권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 보육과 교육에 절대적 중요하다. 동포 자녀의 체류형태는 중앙아시아 방문동거비자(F1)비자와 F4비자 또는 미등록 상태가 많다. 고려인들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서류 문제, 사실혼 문제 등으로 자국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럴 경우 미등록 상태로 무국적이 된다. 공적기록이 없음으로 신분이 존재하지 않아 당연히 학적 인정도 불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체류 기한에 자녀도 종속되어 있어 지속적인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

국내에서는 언어문제로 겪는 차별과 소외 학습부진 등이 야기되고 어느 정도 적응할만 해지면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본국에서도 학업이 뒤쳐지게 된다. 양쪽에서 다 학습 부진아가 될 확률 높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든 본국이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야하나 체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전까지 현재 조건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 선생님들을 활용 한글교육과 함께 본국에서도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영사관과 협의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는 교육 시스템과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보육 복지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고려인 자녀는 다문화가정과 국내 저소득층의 분류에 속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저소득층과 한 부모(편모)가정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지침으로 제한하여 보육비지원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저소득층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고려인 아동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돌봄 시설인 지역 아동 센터 역시 외국인 신분으로 자격조건에서 제한을 받거나 정원으로 순위대상이 아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정책대상이 한국 국적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밝히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국제 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원용하고 있음에도 현재 외국국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다른 복지체계에 편입 되어 있지 않다. 지침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정책적 결정인지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복지정책은 보육이념의 원칙에 따라 국적불문으로 취약 계층의 수요에 따라 시행되어야한다. 저소득층 내국인, 다문화 결혼 이주민과 차별이 없는 보육 복지 및 교육 제도개선이 고민되어야 하고 귀환 동포 복지 정책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특히 취약 계층인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의 경우, 이주여성이 경제를 전담해야하기 때문에 육아와 취학, 자녀 돌봄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늦은 귀가로 인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이 보호자가 귀가 할 때까지 거리에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녁식사도 보호자가 돌아오는 9-10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에도 토요일 특근을 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야간 일도 많이 다니는 고려인 동포들의 특성상 생활 특성에 맞는 돌봄 시설로 야간 돌봄, 방과 후 돌봄, 주말 돌봄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3. ‘고려인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13년 3월 23일 시행 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700만 재외동포 중 아직도 시베리아를 떠돌며 많은 어려움에 처한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모국에서 특별히 만들어준 이름 그대로 고려인만의 특별한 법이다.

법의 제정 취지와 의도는 좋지만 제2조 고려인에 대한 정의에서 국외 고려인 동포들만 고려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3만여 고려인 동포들과 사할린 동포들을 유령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 되어 버렸고 그들에 속한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 처지이다.

국내 체류 고려인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풀어갈 때 활용하기에 좋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부 지원과 대책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예산 확보 관련 조항이 없어 힘 있게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다.

전체 고려인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와 사할린 동포를 포함’하여 새롭게 정의를 내려 고려인 동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한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모국 생활을 위한 거주, 교육, 의료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법의 취지대로 모국과 본국 양쪽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청소년의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다. 부모의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선 어떠한 정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토론문 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김태기(호남대학교 교수)

- (1)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사회의 배외주의는 과거와 비교하여 결코 심하지 않음. 일부 우익(우요쿠)이 선동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 일본인들은 그들과는 다른 입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2) 민족정체성의 함양 문제는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중요한 과제임.
 - (3) 총련의 경우는 민족교육의 위축이라는 현상은 타당함. 단지 민단계의 경우 애당초 민족교육이 부족함.
 - (4) 일본에서 상급학교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일본인학교에 재학해야 하는 현실.
 - (5) 한국과의 교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음.
 - (6) 세대 간 소통 문제는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는 문제임.
- 반한 감정이나 민족학교 차별은 과거의 역사를 보았을 때 개선되는 측면이 있어, 미래 이슈로서는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7) 모국 연구 교육 등의 확충은 앞으로의 정책 과제일 것임
 - (8) 주류 사회 진출 및 상급학교 진학은 영원한 미래 이슈이나 민족정체성 확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9) 일본 내 청소년 조직 기반 구축은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극히 중요한 미래이라고 생각함.

(10) 남북통일문제와 재외동포 사회를 결부 시키는 관점에는 반대함.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였음. 앞으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나갔으면 함.

(11)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이 모두 망라 되어 있음.

(12) 단지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이중국적은 이미 허용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중국적 허용 등은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체류 동포에 대한 의료 보험제도개선은 현재의 제도로 무난할 것임.

(13) 재외동포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복무 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14)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시설적인 지원은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15) 재외동포청소년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센터 건립도 필요할 것임. 상기의 연수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음.

(16) 단순히 학교 교육 관련 교사만 아니라, 음악이나 예술 등 문화 관련 교사 파견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

(17) 재외동포청소년 센터 등, 재외동포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은 물론 재외동포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18) 민족 교육시설 확충은 재외동포가 항상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임.

(19) 동포 기금 및 장학 사업 보다는 국내 청소년과 재외동포청소년의 교류, 재외동포청소년 간의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것임.

토론문 4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박옥식(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대표)

1. 과제명 :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지원

1) 취지

- (1)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한민족 뿌리 찾기 등 한민족 으로서의 정체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잘 적응하며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주시민역량 개발 지원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의 다문화청소년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18세 다문화청소년 인구는 204,000여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 수도 67,000 여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를 넘어서고 있다.
- (3)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시대의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2) 민주시민역량

- (1) 민주시민역량은 시민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과 능력(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시민공동체에 대한 유대감, 참여의지 및 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유사한 개념으로는 시민의식(civic knowledge),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핵심역량 등이 있다(이종원, 김준홍, 2012).

3) OECD 핵심역량 선별(Definition and Sele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핵심역량 세 가지 영역(김기현 외, 2010)

(1)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역량, 사회적 기술, 문화적 역량(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3)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다원화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는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정책 과제의 현재 추진상황

- 1) 현재 추진 중인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지원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한민족 뿌리 찾기 등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과 언어교육, 문화체험 활동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일부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교류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으니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 3)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3. 현 정책과제 추진의 문제점

- 1)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 인재 개발전략 추진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2)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교육과 언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3) 글로벌 시대의 민주시민역량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4)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재외동포 청소년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정책과 연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5)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성 있는 단체 및 기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4. 구체적인 실천방안

1)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센터 운영

- (1)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한민족 정체성 교육과 함께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다양성 교육을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2) 청소년 수련시설 및 각종 단체, 기관들과 효율적인 재외동포 청소년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3) 기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을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민주시민 역량 개발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등)
- (4) 재외동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민주시민 역량 개발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청소년 단체 및 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외동포 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시스템 구축

- (1)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지원이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물론 국내 청소년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므로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3) 청소년 대상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위원회 운영

- (2) 재외동포 청소년과 국내 다문화청소년,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4)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과 연계 지원

- (3)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동질감 형성 지원

<참고문헌>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 총괄보고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김준홍(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I.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문 5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문)

윤경남(국제교육원 장학사)

1. 과제명

-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2. 정책 과제의 현재 추진상황

- 교육부 차원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현황
 - 재외한국학교 예산 (부분) 지원 및 재외한국교육원 운영
 - 해외 초·중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 추진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한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현황
 - 직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주최의 재외동포 국내 초청 연수 운영
(연 200명 교육 인원 중 약 80%의 인원이 청소년)
 - 재외동포 한국어 교재 개발(범용 한국어 교재 및 해당국 언어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
 -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kosnet.go.kr) 운영
- (교육부 허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을 통한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현황
 -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를 위한 온라인 연수 시스템(efka.co.kr) 운영
 -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운영
 -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교과서 보급
-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청소년교육 지원 사업 현황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연수 및 교육자료 제공(study.korean.net)
-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사업
- 한글학교,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

- 기타 기관(대학)을 통한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현황
 - 경희대학교의 남미지역 재외동포청소년 초청 연수

3. 현 정책과제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
 - 교육부, 외교부, 재단,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관련 법령의 미비로 공통 사업 추진 시 부처 간 갈등 유발 가능
 -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지원 법령 제정 및 시행문 수립
 - ⇒ 전체 사업 로드맵 작성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외국정부 관할 하의 자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바, 거주국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국제법 저촉 여부 등 관련 사항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구체적 집행 기관인 재외공관 망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재외동포 청소년 국내초청 연수 장학금 지원 확대 필요
 - 재외동포 국내초청 연수 운영의 경우 일부 장학금 지급사례를 제외하고는 참가 학생들이 교육 및 체재비를 지급하고 참여하여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교민사회의 불만이 지속 제기
 - ⇒ 재외동포 청소년의 모국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가사업은 장학금 명목의 예산 지원액을 높여 우수 인력이 유치되고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재외동포 청소년 국내초청 표준교육과정 제작의 필요성 제기
 -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 국내 초청 연수 교육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어 기관별 상이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어 교육, 모국 이해 강좌(한국문화, 한국사), 현장학습 등 모국 체험을 통한 한민족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등 공통적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가능
- ⇒ 학문적 근거, 정책 연구 등을 기초로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기 추진 중인 정책과 연계한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우선순위로 (외국국적) 재외동포 청소년 선정 및 사업 추진
 - ⇒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시 현지 교육원과 연계한 재외동포 대상 특례 입학 설명회 공동 개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과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기존 정책에 연계 필요

○ 일부 지역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재외동포 2세들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재외한국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 관련 규정 변경으로 재외한국학교 (외국국적) 재외동포 2세 입학 허가로 대한민국 표준교육과정의 정규 교육 기회 부여

토론문 6

(국내외 고려인 청소년의 ‘민족문화교육’ 과 한국과의 교류 확대 방안)

임영상(한국외대 지식콘텐츠학부 교수)

1. 취지

- (1)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민족 동포로,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150년 이상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동포들이다.
- (2) 소련해체 이후 고려인은 러시아 고려인, 우즈베크 고려인, 카작 고려인 등 상이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로 우즈베크 고려인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모국인 한국으로 재이주 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 (3) 2014년 국내 체류 고려인은 약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안산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부산광역시 등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체류 고려인사회도 가족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 (4) 그러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국내 체류 고려인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한국사회 적응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고려인 청소년이 자신도 한민족임을 알게 할 수 있는 민족문화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 (5) 러시아, 우즈베크, 카작 등 CIS 국가에 살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도 한류 확산 등의 이유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현지의 한국교육원/한국문화원 시스템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 (6)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유학 및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과 한국/한국사회의 소통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 4월3일 발족한 재한고려인유학생네트워크(회장 이 빅토리아) 고려인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국친구 사귀는 것이 가장 어렵다.”

2. 실태

- (1) 국내 고려인의 집중 거주지인 안산시 각지에는 대략 5000여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이 중 고려인마을인 땃골(선부동)에는 약 2000여명이 집단촌을 형성하며 거주하고 있다.
- (2) 안산시 고려인들의 한국어와 역사·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위해 민간단체인 너머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공간과 상담, 통번역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활동가들의 헌신으로 메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고려인 대상의 역사·문화·예술 교육 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은 지난 2005년 30여가정의 고려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 2천여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정착촌이 되었다.
- (4)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 마을의 한국어 및 역사·문화·예술교육은 아동센터, 고려인어린이집, 새날학교에서 외국문화와 우리의 전통 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다문화 체험활동과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에 맞는 역사·문화·예술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 (5) 안산시의 고려인 야학 너머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너머의 여름 역사교실」 등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민족문화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안산시에 위치한 지역박물관들도 2014년 처음으로 재한 고려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사문화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 (6) 러시아 연해주 아르쎈의 칠성가무단은 한국전통무용과 춤에 매료된 고려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공연단이지만 우수리스크의 아리랑가무단 못지않다. 안무지도는 북한 출신이 맡고 있는데, 지역 고려인사회의 결혼식, 회갑연 등에 초청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고교를 졸업하면서 종결된다.
- (7) 1991년 창립된 사할린 에트노스예술학교는 사할린 속 한국문화의 침병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한민족 전통음악을 도입한 이후 러시아민속음악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사물놀이, 가야금, 한국무용에 이르기까지 레퍼토리를 확대해 왔는데, 한국교육원의 지원 아래 여름마다 진도 남도국악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3. 방안

- (1) ‘청소년과 함께하는 너머의 여름 역사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가장 기뻐한 것은 땀골을 나와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2014년 안산시 지역박물관이 시행한 재한 고려인 대상 역사문화교육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도우미 학생들과 고려인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문제였다.
- (2) 재외동포센터, 특히 재외동포청소년센터는 동포들이 집거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우선적으로 교육(숙박시설을 갖춘)시설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안산시가 너머 근처에 준비하고 있는 고려인지원센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 (3) 전국에 8개 대학 34개 캠퍼스를 갖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종합기술전문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경기공업고교로 유학온 고려인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 졸업해도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점에서도 한국폴리텍대학이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다.
- (5) 중국조선족유학생들은 2003년에 단체를 결성하여 어려운 가운데 코리안드림을 이루어 가는 그들 부모 및 선배 조선족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은 동북의 조선족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조선족 학생들의 멘토로 역할을 하고 있다.
- (6) 2015년 4월에 발족한 재한고려인유학생네트워크 고려인 학생들이 2015년 8월 안산시 지역박물관이 시행하는 고려인 청소년 민족문화교육에 도우미로 참여하기로 했다. 사실 고려인 유학생 자체도 청소년으로 한민족문화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 (7)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 유학, 특히 민족문화예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을 한국의 고교(예, 전주 한국전통문화예술고등학교)와 대학(국내 예술대학의 관련 학과) 진학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8) 중국조선족, 재일코리안, 그리고 고려인 청소년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 청소년과 함께 갖는 민족문화캠프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재외동포 청소년과는 또 다른 역사적인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다.

토론문 7

채정민(서울 사이버 대학교 교수)

1. 델파이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는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사업을 위해 늦었지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함. 그 결과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비교적 잘 수렴되었다고 봄. 하지만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향 설정’이나 ‘체계적인 정책 방향 및 지원 목표 설정’과 같은 의례적인 의견들도 다수 우선순위의 상위에 올라있는 등의 문제와 유사한 의견들이 쪼개져서 개별 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해서 이에 대한 재범주화가 필요해 보임. 특히, 유관 영역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종합적인 정책 사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임.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3개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안함.

1) 과제 1

- (1) 과제명: 재외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청소년과 그 부모 교육과 자문 기관 설립
- (2) 정책 과제의 현재 추진상황
 -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인 토마스 김은 동포 1.5세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돈과 명예만 쫓고 한국말을 모르고 조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약화를 지적했다.
 - 위와 같은 지적은 다수의 미국 동포 원로들에게서도 나온다.
- (3) 현 정책과제 추진의 문제점
 - 이번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미주지역의 경우 제1 우선순위가 ‘미국 주류 사회에의 진출’이고 제2 우선순위가 ‘정체성 혼란’이고 그 이하 우선순위에서도 이 2가지 측면과 연계된 것이 많다.
 -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설정해야 할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 과제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외 재외동포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제시되었는데, 이를 기본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4) 구체적인 실천방안

- 일단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교육기능 : 청소년 인성과 진로 교육, 부모의 양육 교육
 - * 상담기능 : 청소년 자신과 부모 둘 다 심리적 상담
 - * 정보제공기능 :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 연구기능 : 위 문제와 관련된 연구 문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화
- 미주지역에서 2년 정도 진행 후 사업방식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

2) 과제 2

(1) 과제명: 재외동포 청소년의 국내 기관과 인물 연계화

(2) 정책 과제의 현재 추진상황

- 재외동포 청소년의 국내 단기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인연의 끈이 길지 않아서 지속적인 유대감을 갖기 어렵고 이는 나아가서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글로벌화 된 사회에서 한국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국내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현 정책과제 추진의 문제점

- 이번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중국 지역의 경우,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한중 FTA에 대비한 인적자원 육성, 현지 한국학교의 지원 등이 도출되었다.

(4) 구체적인 실천방안

- 재외동포 청소년 1인당 최소 1개 국내기관과 1인과 관계를 맺게 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지원한다. 그 대략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단, 이 내용이 멘토링 프로그램과는 다소 성격이 다를 수 있다.
 - *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 이들 연결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원을 받고, 적절한 기관과 인물을 연결시켜준다.
 - * 적용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 적용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연구하여 사업 내용에 피드백 한다.

3) 과제 3

- (1) 과제명: 재외동포청소년의 개인적 성공과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2) 정책 과제의 현재 추진상황
 - 현재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본 계획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엽적이고 파편적으로 사업 단위로만 진행되고 있다.
- (3) 현 정책과제 추진의 문제점
 - 각 관련 정책들이 단발 적으로 진행되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고,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 이번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비전 및 장기적 정책 부족’과 ‘재외동포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 (4) 구체적인 실천방안
 - 이 마스터플랜 수립이 다른 일반적인 정책수립 연구와 같은 초단기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대략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 진행 기간은 적어도 2년 정도이어야 한다.
 - * 유대인 등의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 *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법의 제정과 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 * 연구 인력은 최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해야 한다.
 - * 통일 한국의 시대에 재외동포청소년의 기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